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 열린단상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메시지

CONTENTS

- 1_ 열린단상
- 2_ 연구원 리서치 1 / 이승형
- 3_ 연구원 리서치 2 / 김보국
- 4_ 연구원 리서치 3 / 김진석
- 5_ 연구원 리서치 4 / 이강진
- 6_ 포커스 전북경제 요약
- 7_ 세미나 지상중계
- 8_ 연구원 소식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도 없다. 서양에서 100년만에 이룬 변화를 우리나라는 수십년만에 성취한 것을 기적처럼 자랑스럽게 여긴 적도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와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는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일궈낸 우리나라의 성장문화를 대변하는 말로 통한다. 몇 년전 "바뀌 바뀌 세상을 다 바뀌 모 든 걸 다 바뀌..."라는 노래가사가 급속도로 유행했고, 또 선거캠페인 송으로까지 인용되기도 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실천적 의지는 미흡한 것 같다. 단순히 변화야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 최적의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임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공장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 반도체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현지공장을 세운 것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집중과 선택, 블루오션, 비교우위 등의 차별화 전략이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고객가치만족시대에 적합한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Five More Policy 시대에서 질을 중시한, 고객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시대로 옮겨왔다. 종전의 마케팅이 기업의 측면에서 제품을 파는 기술 즉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4C(Customer Value,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로 대체되었다. 맞춤형 자동차나 아파트, 친환경농산품이 등장하였고 관광, 행정, 교육 분야 등에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예다.

셋째, 정보 및 지식기반시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의 요소(토지, 노동력, 자본)투입형 경제방식과는 달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확산, 분배 활동이 개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창조적 사고를 통해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메시지다.

달걀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어 씨암탉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깨뜨려지면 그 자체 용도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듯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아관리와 능력배양, 외적 변화 환경에 대응하는 내생적 능력의 발현, 이는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메시지인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장 |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열린뉴스 2006. 4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2004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005년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라북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지역의 복지·의료시설의 열악함과 낙후된 교육여건, 취약한 생활여건과 더불어 낮은 농가소득으로 인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이농함으로써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산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농산어촌 경관보전과 체험·휴양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여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도시민의 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수요에 비해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수용기반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등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이 상호간 정보교류나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는 다수의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들을 상호보완하는 통합적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농산어촌의 체험·휴양 등 관광과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가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상향식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주민은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의 기본 자원이 농촌다움의 보전과 재창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마을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및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관련부처별(농림부, 행사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전라북도가 상호보완적·통합적접근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농촌마을 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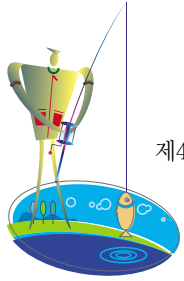
기존 연구의 경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 또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전라북도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개발 활성화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도자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별화된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직 및 관리체계, 교육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을 활용할 것이다.

산업·경제연구팀 | 이승형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과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국토개발수요가 2002년 5.8%에서 2020년에는 9.1%로 증가되어, 약 3,848km²의 추가 개발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적 용지 및 여가시설 등의 수요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의 추진은 국토환경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산, 노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는 관광·위락수요가 증가, 이에 따른 교통량 및 소비 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압력을 증가시켜 자연환경보전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산업의 시장 규모가 1997년 313억 달러, 2000년 54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경에는 2,1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물자원 또는 유용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오 상품의 연간 세계 시장 규모가 최소 5천억 달러에서 최대 8천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1세기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생물자원의 가치 및 보전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농산물 등 생물관련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 및 수입 제한, 새로운 바이오 제품에 대한 로얄티 제공, 해외 생물자원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립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생명공학(BT)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으로 각국의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자연환경의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표 1>과 같이 자연환경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 2005.6.28. 제 28차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는 10년간 정부·전라북도·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 1> 환경부 2015년 자연환경 목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

구 분	'05.12월 현재	2015년 목표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	9.6%	15.0%
(생태경관보전지역)	(0.29%)	(0.5%)
(습지보호지역)	(15개소)	(30개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4%)	(2.8%)
람사협약 등록습지	3개소	10개소 이상
야생동물 이동통로 운영	92개소	205개소
생물자원관	1개소	7개소
국내 생물종 발굴	29,916종	6만여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	333종	3,000종
멸종위기종 복원	반달가슴곰 등 10종	64종(동물 28종, 식물 36종)

전라북도가 동부산악권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은 경관이 우수할 뿐만아니라 보전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과거 타 지역의 가속화된 발전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지역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자연보고를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자연환경 10년을 계획하는 급변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발전의 제약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로드맵을 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환경관리지역의 설정, 생태축구축, 생태계우수지역 관리, 생물다양성증진, 자연경관관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연구과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관리지역의 설정을 위해 전라북내 환경정보와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지역의 공간구조 분석을 전제로 하여 절대보전지역, 우선보전지역, 완충지역, 친환경적 관리지역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라북도를 건강한 유기체로서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원, 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정 면적 이상의 면적 요소와 소규모 녹지 등 연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적 요소 및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강, 산맥, 녹도 등 선적 요소를 포함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더(Corridor)로 구분하여 생태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높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자연생태축으로 중요한 곳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 우수지역을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야생동·식물 보호와 생물자원의 보전 등은 서식지 보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녹지이용권 설정 및 녹지이용밀도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생태관광계획 등 생물자원이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간, 주민과 지방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환경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실천을 위해 주민과 비정부그룹의 참여 방안도 신중하게 강구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연구팀 | 김보국

전라북도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과 대안



국제경쟁의 심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지역단위의 발전정책 수립과 추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지역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지식경제하에서는 기술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학습능력을 보유한 노동력, 지식의 습득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 및 학습기회의 존재 여부, 즉 학습하는 인적자원과 학습환경의 지역적 존재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의 개발은 지역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경제가 복잡다기해지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내용이 지역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노동수요에 바탕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중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대상이거나, 중앙에서 수립된 정책의 집행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라북도는 지역경제발전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체됨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인구유출을 경험하였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과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인구유출현상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현상 등은 지역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및 고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매우 적다.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위임사무 집행이 중심이며,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미비하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역에서 통합·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라북도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전북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사 업 내 용
직접적 고용창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취업연수생 고용	· 인턴사원제, 중소기업취업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 전라산업 및 자연산업 육성
간접적 고용창출	혁신클러스터 조성	· 군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 바이오파크구축사업 등
	산업단지조성	· 전북과학연구단지, 군장산업단지 등
	창업지원	· 창업보육센터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기업애로해소팀 운영 등
	취업지원	· 채용박람회, 고용안정센터 운영 등
	기업유치	· 국내외기업유치 활동
	공공기관 유치	· 정읍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유치 등
대학인력 양성	지역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역량 강화
	전문대학특성화사업	· 특성화 인력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산학협력 증진
산업인력 양성	고용촉진훈련	· 맞춤형 고용촉진훈련
	혁신센터(TIC, 센터 등)교육사업	· 4개 TIC 및 2개 혁신센터에서 전라산업분야 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 기반조성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 전북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 개최	· 기능인 육성 장려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혁신협의체, 학관실무협의회 등

첫째, 지역의 정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이며,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극히 적다. 그러나 지역정책의 효율성은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에서 고용관련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기타 정책을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고유성에 기초해야 하므로 우선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지역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 기획·집행·평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자체의 정책 경험이 부족하여 지역의 정책 역량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책 총괄부서의 설치,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다양한 관련 주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정책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하다. 산업계,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내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많은 협의체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높으므로, 보다 실천적인 협의체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경제연구원 | 김진석

지역통계 개선과 활용방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평가하여 전라북도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파악 및 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존의 통계생산체제 및 내용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전라북도가 이제까지 부족하였던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통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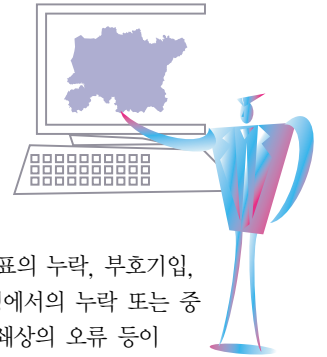
1995년 민선1기의 출범과 지방자치의 초기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기관의 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작성 통계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기관수 뿐만 아니라 작성통계수에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을 확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인프라의 증가 없이 통계의 양적인 증가는 통계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통계의 양적인 면에서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정부에서 생산하는 통계연보의 작성체계를 보면 각 시군의 통계자료와 도 본청 해당부서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그리고 통계청이나 지역상공회의소 등 통계생산기관에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승인을 얻었으며 토지 및 기후 등을 포함하는 기본통계를 비롯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최근 전북경기를 나타내는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시·군의 통계조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통계를 담당하는 실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과장과 계장, 그리고 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면·동에는 통계기능이 폐지되어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 통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성숙은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를 급증하게 하였으나 조직, 인력 예산부족으로 지자체의 공급능력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역통계 작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획설계단계에서 개념과 정의 및 분류의 오류, 불명확한 조사지침서, 모집단 명부작성의 오류, 표본설계의 오류, 조사표설계의 오류, 잘못된 조사방법, 부적절한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기간의 선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 자

료수집단계에서는 조사원과 응답자에 의한 오차가 주 원인이며 조사원의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조사원에 의한 불성실한 보고, 응답내용의 오기, 응답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응답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자료처리 및 공표단계에서의 오류는 조사표의 누락, 부호기입, 분류, 편집과정에서의 오차, 집계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중복, 자료의 가공과정에서의 오류, 인쇄상의 오류 등이 발생한다.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시·군·구와 이를 감독하는 도에서는 위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청 각 실과에서 상급기관의 부서로 보고하는 자료와 통계연보작성을 위해 시·군·구청 통계담당부서로 제출하는 자료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목별 세목 자료치 합산의 정확성을 확인 하며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통계인프라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통계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관심 없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를 확보할 수 없다.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이 자료수집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여 각종 통계를 보급하고 지자체 통계활동을 지원하는 통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지역통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있는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는 통계DB를 구축해야 한다. DB구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작업은 통계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통계수요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통계기능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계DB의 구축은 국가적인 추세이며,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계수요조사 및 전문가들의 통계포럼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전라북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어 DB화가 되면 전라북도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수요 및 통계개발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져 사회적으로 최적량의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려는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연구팀 | 이강진

경제동향으로 본 “전북의 비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는 경제제일의 역동전북, 신성장 전북의 원년을 맞이하여 포커스 전북경제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포커스 전북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기업의 꿈은 전북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최근 전북경제의 동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본란은 포커스 전북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전라북도 경제 운용방향

전라북도는 2006년도 경제 재도약의 호기를 맞이하여 『경제 제일의 역동 전북 신성장 전북의 원년』이라는 금년도 경제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성장률 전국 상위권 진입, 500개 기업유치, 일자리 15,000개 창출, 물가 3%대 안정유지, 수출 55억불 달성을 이루기 위한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북의 경제규모를 현재 전국 3.1%에서 2010년에 3.5%대 진입, 2015년 4%를 달성하자는 목표와 비전이 제시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기업만족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 등 10대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경제 운용방향으로 결정하였다.

1. 생산형 산업경제구조로 변화

전북경제는 그동안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이었으나 2004년 설비투자 확대(2003년 -1.5% → 2004년 12.0%)를 계기로 2차산업 비중이 확대(2003년 21.8% → 2004년 24.6%)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라북도의 경제가 생산중심의 고성장 구조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2. 2003년 이후 전국 평균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

그 동안 전북은 산업화 부진에서 오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면서 낙후 지역의 대명사로 상징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 11월 발표예정(통계청)인 2005년도 전북 총생산 성장률도 전국평균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성장률(%) (전국)	4.9 (15위) (8.1)	1.7 (12위) (4.0)	3.2 (16위) (7.7)	5.1 (6위) (3.3)	5.1 (6위) (5.1)
GRDP전국 구성비(%)	3.28	3.22	3.10	3.06	3.07

산업생산 증가율도 충남을 제치고 전국 2위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6년도 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17.6% 증가하여 전년도 평균 증가율 5.4%는 물론 금년도 전국평균 6.4%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LS전선 등 그 동안 유지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시작한다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아이큐파이 전북』 프로젝트 추진

전라북도는 2005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한 『아이큐파이 전북』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LS전선등 대기업 14개 업체를 포함한 407개 업체 1조 9,330억원을 투자유치 하였다. 2006년 2월 현재 대기업 4개 업체를 포함 72개 업체가 유치?창업하여 전년 동기대비 업체수 63.6%, 투자액 480% 증가하는등 2006년도 유치목표 500개 업체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증감률(%)	
	1월	2월(A)	누계(B)	1월	2월(C)	누계(D)	A/C	B/D
업체수(개)	17	27	44	33	39	72	44	64
투자액(억)	245	212	457	1,214	1,453	2,667	585	483
중업원(명)	352	317	669	1,276	1,336	2,612	321	290

기업유치의 활성화로 전북의 산업단지는 2004년도 분양률이 66.0%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7.5%로 11.5%가 증가하였다(신규분양 1,020천평). 산업단지 3개소 300만평과 농공단지 9개소 67만평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사랑의 일환으로 ①기업 기살리기 ②기업애로해소 ③경영활동촉진 ④반기업정서해소 ⑤신노사문화정착 5대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구조상 기업이 전북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반기업정서 해소와 노사화합 등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는 도민들과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기업사랑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사랑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사랑 붐 조성 및 도내 기업인 기 살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월간 4억불 수출시대 정착

2005년도 수출실적은 48억 5천만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로 전 12.3%를 상회하여 2006년의 목표 55억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파동, 유가상승, 환율인하 등 수출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부품이 호조를 보여 2006년도 2월중 수출은 4억 2,01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2%가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은 1억 8,63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 상승에 그쳐 2월중 무역수지 흑자가 2억 3,381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5. 전국 최고의 일자리 증가율로 실업률 완화

노동부 워크넷(Work-Net)을 통하여 나타난 취업시장 고용동향에서 전북의 2005년 일자리 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워크넷을 통하여 신규구인인원은 2004년 대비 2005년 48.8% 증가되었다. 특히, 2006년도 2월중 전북 실업률은 전년 동기대비 0.5%하락한 2.8%에 그쳤으나 전국 실업률은 0.4%상승한 4.1%로 나타났다.

6. 경기종합(동행)지수 상승

전라북도가 분석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에서도 2005년도 4/4분기중에 118(10월), 118.2(11월), 118.7(12월)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6년도 1월중에 119.8로 전월대비 0.89%가 상승하였고, 실질적인 경제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순환변동치도 2005년 4/4분기중에 99.5p선에서 3개월간 횡보를 거듭하였으나 2006년 1월중 100.08p로 상승함에 따라 1월을 분수령으로 저점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2006년도 경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방안”

전북발전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3월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만금 관광개발방안(호원대 장병권교수), 새만금 친환경첨단농업단지 개발방안(전북대 손재권교수), 새만금 신산업 및 항만물류단지 개발방안(전북발전연구원 박형창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와 원광대 이양재교수의 사회에 의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본란은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註

Ⅰ 토론내용 I

◆ 양재삼 (군산대학교수)

대법원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어민들의 보상에 관한 시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991년 보상은 했지만 6년간의 공사기간동안 정신적인 피해 등의 보상문제 남아있다. 둘째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염분농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될 경우 조개류 폐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고군산군도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고 마스터플랜은 완료되었지만 그동안 소송 등으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모텔 등 소규모의 건설로 난개발 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1억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새만금을 타 관광지와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독특하게 개발해야 경쟁력이 있다. 넷째 토지의 상당부분을 유보지로 남겨둬야 한다. 네덜란드 주다치는 50년간의 기간을 거쳐 개발되고 전체면적의 10%만 활용하고 있다.

◆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새만금사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첫째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질문제에 대해 납득 가능한 수질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각계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새만금 신항이야말로 전북의 희망이다. 전북에게 가장 필요한 항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해수부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 막연한 동의 주장보다는 정부 정책과 조율 및 일치시키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김진태 (새만금신구상 도민회의 상임위원)

전라북도가 처한 주변의 여건과 방조제 건설 이후 10여년 후의 환경정책 문제 등이 충분히 거론되지 않았고 세미나 발표가 너무 전라북도만의 시각에서 접근되어 있는 것 같다. 새만금 개발에 따라 순차적인 수질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3~2004년 만경강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었지만 말뿐 직접적인 방안이 없다. 개발의 시기와 진행을 고려한 개선방안 필요하다. 또 새만금 개발의 차별화된 강점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시설의 개발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민봉환 (새만금 피해주민 대책위원장)

새만금 개발은 환영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미약하다. 1991년 보상부분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응답이 없다. 1991년 4,600억 보상 중 간접 보상 1,700억, 나머지 금액으로 2만여 어민 중 기준없는 선별로 7,000여명에게 평균 65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시 피해주민들의 생계대책도 특별법에 반영하여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용환 (호원대 교수)

우선 제반준비 없이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만으로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서해안 관광거점을 위해서 새만금만의 특화된 요소가 필요하다. 타 지역과 차별된 군산의 회센터, 철새도래지, 일제시대의 수탈사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둘째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만금 북측 접근도로의 정비도 필요하다. 북측의 자동차전용도로 명칭을 ‘서해안로’와 같이 명명해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군산IC에서 금강하구둑으로의 접근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

새만금 산업단지 용지의 분양가격이 저렴해 매립이 먼저 되는 새만금 북측의 토지부터 산업용지화 하면 경제적이 될 수 있다.

◆ 홍옥희 (새만금환경연구소장)

수질개선계획에 투입될 예산 1조 8,000억 중 현재 3,000억 정도만 투입되었고, 왕궁지부의 오염원도 조만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의 수질악화 우려는 염려할 바가 아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계적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성급하다. 새만금 추진동력이 너무 약하고, 오늘 세미나가 과거보다 진보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새만금 개발 추진계획 수립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전라북도 의지와 도민의 참여가 너무 약하고, 전라북도 예산 중 새만금 개발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낮다. 새만금 재단 등을 설립하고 성금, 기부 등으로 재원 마련방안을 제안한다.

◆ 김진태 (새만금신구상 도민회의 상임위원)

홍옥희 소장의 말과는 달리 1조 8,0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악화 속도와 수질개선 속도가 어긋난다면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 고창의 정병석씨의 ‘해수유통시 선박접안 어렵다’라는 문제는 해수유통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이다.

◆ 김영태 (새만금협의회 환경부문)

미생물을 활용한 새만금 수질 개선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고, 각 지역에 미생물 배양방법 등을 교육하여 수질개선 운동을 펼쳐야 한다.

◆ 정병석 (고창)

새만금 개발은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접근 시각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접안능력 50선석이 가능한 수심과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에 항만건설은 필연적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데도 해수유통을 할 경우 접안이 불가능하다.

◆ 장병권 (호원대학교수)

도로높임사업은 농촌진흥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으나 노면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손재권 (전북대학교수)

새만금은 장기사업이므로 단계적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 박형창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부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송 등으로 인해 해수부의 물동량 조사에서 새만금이 잠시 유보된 상태다. 향후 ‘전국무역 항만개발계획’에 물동량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개발은 10년 후를 내다 보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본원은 지난 3월 10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간단한 기념행사와 함께 3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각계전문가와 도민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의 최대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여성정책연구소 학술대회

본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3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4회 지방선거와 여성후보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의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경숙(공주대학교) 교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는 여성단체의 지방선거 지원활동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여성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을 통해 본 여성유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무주관광레저도시의 성공추진을 위한 토론회

본원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23일 무주리조트에서 『무주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 조성방안』을 주제로 내실 있는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06년 1차 이사회

본원은 지난 3월 27일(월) 본원 회의실에서 2006년 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예산결산과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 연구원-전라북도 조찬간담회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라북도 기획혁신전략본부는 3월 24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도의 대응전략을 논의 했다.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크와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게시판

▶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축전’의 메인행사인 「과학기술혁신포럼」을 4. 20(목) 13:00에 전라북도청 중회의실(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사는 정윤 조정관(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 정성철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문경일 박사(서울시정연구원 산학연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용만 과장(전라북도 과학산업과) 등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논리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책임 : 이동기 (문화관광연구원장)

2006년도 정책과제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논리개발” 이 발간 되었다. 섬진강 권역은 뛰어난 자연자원 및 영상 인프라를 가진 전라북도의 영상물 촬영의 요지로 부상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섬진강 권역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을 비롯한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영상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을 수록 하였다.

연구원 동정

- 한영주 원장은 3월 23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열린우리당 주관 「국민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지방순회 간담회」에서 “새만금 개발 방향과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 한영주 원장은 3월 28일 남원 하이즈콘도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과 동부권 개발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
- 조경옥 연구위원은 4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고품위 사회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